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의식 조사연구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김 기 완

1999년 8월

#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의식 조사연구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6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기 완

김기완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9년 7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국문초록>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의식 조사연구  
-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

김 기 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에 들어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이념적인 테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통일교육의 환경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통일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안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변화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환경에 대한 의식을 설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하며 통일관도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의 형태도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어려운 IMF상황하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김정일 체제의 북한도 안보상으로는 적대 대상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도 과거의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나 반공, 승공이 아닌 남북이 하나라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서

첫째, 통일교육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사들을 주체적으로 참여 시켜야 하며,

둘째, 통일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획득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제안한다.

---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한국의 통일정책-----	4
2. 북한 김정일 체제의 성립과 통일정책-----	11
III. 조사 방법-----	20
IV 조사결과와 분석-----	21
1. 통일문제 일반-----	21
2.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29
3. 김정일 체제와 통일정책-----	35
4.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49
V 결론 : 요약 및 제언-----	60
참고문헌-----	64
Summary-----	67
부    록-----	69

## 그림 및 표목차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22
그림 1-1.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3
그림 1-2. 통일 불필요의 이유-----	24
그림 2. 통일의 상태-----	26
그림 3.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	28
그림 4. 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30
그림 5.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3원칙-----	32
그림 6. 금강산 관광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34
그림 7.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에 대한 견해-----	36
그림 8.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북한 체제-----	38
그림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와 전쟁도발 가능성-----	40
그림 10.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향후 남북관계-----	42
그림 11.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에 대응한 대북 정책-----	44
그림 12.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	46
그림 13. 북한의 군사적 모험과 통일환경에의 영향-----	48
그림 14.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50
그림 15.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	52
그림 16.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획득수단-----	54
그림 17. 현 학교 통일교육의 당면 문제-----	56
그림 18. 통일교육의 교수방법-----	58

# I. 서론

우리 민족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지상 최고의 과제이자 염원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하여 구체적인 분단이 있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6·25와 같은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등 대립과 반목·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아직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통일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인 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서적 면도 있다. 또 국내적인 면과 국제적인 면이 있다. 이는 통일환경의 복잡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정치집단으로 나뉜 상태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방법과 절차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 추진과정에서도 두 개의 정치집단을 대표하는 각 정부의 정책이 모든 방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은 각 정부가 그들의 통일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문제를 시행주체로 본다면 두 가지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이끌어 가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 수립되면 그를 바로 알고 따름으로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국민이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 혹은 채택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역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국민의 역할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통일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가

다. 통일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그 성격과 내용은 복잡 다단하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교사의 역할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교사의 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통일의식을 정립하거나 그를 반영한 교육방안의 수립 노력이 미미하며 그를 위한 자료마저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앞서 언급한 통일정책과 부수적으로는 통일교육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파악은 단순히 교사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의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자료들을 통하여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초와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 김정일 체제의 통일정책을 살펴 보려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통일관과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김정일 체제 등장 후의 대남정책 전망, 그리고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견해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통일환경을 다루지 못하고 제한된 정책 문제만 다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구의 목적상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초등학교 교육현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게 되어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북한의 비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이 이루어지고 문항수도 달리한 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의식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서 생긴 문제라 생각한다.

둘째, 연구 방법상에 있어서 도내 초등학교 교사의 소수만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변인 설정이 단순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같은 사항에 대한 교사 등과 학생들의 의식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의 통일정책

#### 1).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해방 이후 계속 되어온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방직후에는 통일이란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선을 철폐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만을 가졌었다. 그러나 1948년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통일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외세에 의한 분단이 내부적인 외세의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세워진 공산 정권을 타도하여 북한 주민을 구출해 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sup>1)</sup> 그 당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방안으로 대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 통일이라는 총선거 통일방안을 공식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공공연하게 무력북진통일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냉전기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권의 이중적 통일방안의 밑바닥에는 철두철미한 적대적인 북한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부정일변도의 북한관이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의 실질적 기조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sup>2)</sup>

4·19의 결과로 들어선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의 무력통일 입장을 공개 철폐하는데 그쳤으며, 1960년 8월에 외교시정 방침을 통해 “유엔 결의를 존중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행한다.”<sup>3)</sup>고 발표하여

---

1) 이성일(1994),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11.

2) 양영식(1997), 「통일정책론」, 박영사, p.12.

3)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편(1989), 「민주통일론」, p.38.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장면 정권은 유엔에 의한 총선거 통일방안을 고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건설 후통일」 정책기조를 확고히 견지했다<sup>4)</sup>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 역시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정책 구호아래 통일 논의보다는 평화 통일을 위한 힘을 기르는 ‘통일 역량 배양 정책’을 1960년대 말까지 추진하였다.<sup>5)</sup>

제3공화국에서는 ‘중립론’이나 ‘남북교역론’등은 반공법 위반으로 다루어져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sup>6)</sup>

1970년 8월 15일, 남북한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는 ‘평화 통일 구상 선언’을 제안한 이래, 1971년에는 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을 인도적 견지에서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고, 1972년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 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973년 6.23선언을 통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공산권 문호 개방을 선언하였다 1974년 8월 15일에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을 통해 ①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을 통한 평화 정착 ②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③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를 천명하였다.<sup>7)</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탄생한 제5공화국은 1981년 1. 21 대통령 국정 연설을 통해 남북한 최고 당국자의 서울, 평양 상호 방문을 제의했고, 1982년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통해 ①통일 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제의 ②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 제의 ③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수락 촉구를 제의했는데 이는, 70년대 이래의 기존 통일 정책 기조 선언, 남북 제의 등을 일관성 있게 집대성한 것이다.<sup>8)</sup>

1984년에는 수재 물자 수수를 계기로 70년 중반이래 중단된 남북 대화를 재개

---

4) 양영식(1997), 전계서, p.35.

5)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편(1989), 전계서, p.38~39.

6) 이장희(1988), “한반도에서의 동서독 통일모델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논총」 통권 84호, 국토통일원, p.128.

7) 양영식(1997), 전계서, p.160~182 참조.

8)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편(1989), 전계서, p.46.

시키고, 적십자 회담, 경제 회담,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 체육회담 등 다각적인 대화와 접촉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등 한정적이거나 남북 교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제5공화국에 이어 들어선 제6공화국은 1988년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sup>9)</sup>을 통해 평화 통일의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방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골자로 하는 북방 정책 구상을 공포한 뒤, 통일외교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89년 9월 11일에는 대통령 국회 특별 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sup>10)</sup>을 제시했으며 1991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정립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한 핵문제에 가로막혀 문서상으로 합의한 4개 공동위의 가동이 무산되었고 이산 가족의 교환 방문이 좌절되는 등 실질 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의 주요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보면 93년 이인모 노인 무조건 송환을 허용하였으며(3. 11),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3대 기조의 천명(7. 6),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시(10. 5)등을 들 수 있으며 94년에는 T/S 훈련 조건부 중단 결정 발표(3. 3), 남북 정상회담 예비접촉 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7월 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8. 15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천명하였으며 95년에는 북한의 대홍수 재해와 관련 15만 톤의 대북 식량제공을 위한 남북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발족, 김영삼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고 96년에 있어서는 잇따른 북한 주민의 탈북 상황과 관련 탈북자 700명 선별입국 수용용의 표명, 4자 회담 실천방안 제시들이 있었고, 97년도에 들어와서는 늘어만 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법」을 마련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구체적 대

---

9) 양영식(1997), 전계서, p.230~232 참조.

10) 상계서, p.267~272 참조.

책을 서둘러 왔다.

## 2).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1998년 2월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정부의 성격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여 스스로 책임감과 자신감을 표현하였다.<sup>11)</sup>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평화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정책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 통일의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은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 바탕으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평화 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 붕괴

---

11) 김도태·조민(1999), “새정부 통일정책의 추진기조와 개선 및 보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p. 3.

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한의 상호이익이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나, 새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한다. 동시에 진행중인 4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 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획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통일분야의 7대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sup>12)</sup> 여기에서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조성을 목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들의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추진방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 구도의 확립」을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 - 구체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 실천

---

12)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1998, 2, 12), 참조

제의, 특사교환과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재회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의 지속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통일후 소요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통일한국의 토대 구축의 바탕을 위하여 교류협력 승인절차 간소화 및 투자규모 제한 완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유도 및 위탁가공교역 확대,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추진, 북한지역 자원의 공동개발 및 제3국 공동진출방안 모색, 속초-나진-훈춘간 카웨리 항로 등 관광교류 추진, 설악산-금강산 등 남북자유관광지대 공동개발, 북한지역의 관광특구에 대한 투자 촉진,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그리고 종자, 영농자재·기술지원 및 농작물 계약재배 추진, 남북간 교통통신망 복원·연결 추진,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 ③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 이 과제의 필요성은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시키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하여 통일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문화·학술·예술분야 교류협력 추진, 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및 국제체육행사 공동참가·유치 추진, 제3국 개최 남북 종교교류행사 지원 및 순수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 확대, 명승·자연풍물 등 비정치분야 방북취재 지원 및 방송 프로그램 교환·공동제작 추진,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의료기반 조성 및 기술 지원 등 ④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산 1세대에 대해 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해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 우편물교환 추진,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허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이산가족들의 재회사업 지원을 위해 「한적」 중심의 이산가족교류 민간협의체 결성,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 추진, 그리고 재북가족 지원 및 재결합 등 이산가족교류 관련 법령 정비 등 ⑤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일·중·러 등 주변국이 보장·지지하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4자회담의 추진체계의 남북당사자 해결구도로의 전환, 남북군사공동위 개최를 통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실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노력

강화,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교류협력 지원 등 ⑥ 대북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 경수로 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의 도모, 교류·접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EU간 역할에 상응하는 합리적 재원분담 대책, 경수로 건설현장을 「시범적 남북 화합의 장」으로 중점관리, 지속적인 국제 핵사찰을 통해 북한 핵개발 의혹 제거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⑦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참여하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비공식 조직을 통한 남북협상 배제로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 제도화,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등의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sup>13)</sup>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화해·협력을 통한 안정기반 조성과 남북한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햇볕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당근과 채찍정책이 북한에게 화해정책을 추구하되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남 도발을 강행할 경우 즉시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던 데 반해 햇볕정책은 북한의 도발 강도와 유형을 신중히 고려,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때는 대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햇볕정책은 인도주의 원칙, 정경분리 원칙,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대북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 상호주의 원칙을 종전과는 달리 유연하게 해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상호주의 원칙은 북한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시차, 내용 등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대국적인

13) 김도태·조민(1999), 전거서, p.14~17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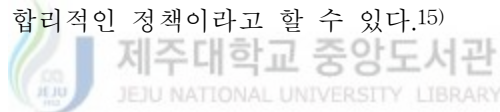
14) 이서항(1988),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의 재정립”,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p.

견지에서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종래에는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햇볕정책 하에서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정경분리 원칙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요건에 대한 제한도 거의 철폐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한 지원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공존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은 경제에 대해서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압박보다는 유연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 2. 김정일 체제의 성립과 통일정책

###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는 북한이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 3개월간 계속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에서 탈피, 사회주의 체제의 핵인 당비서가 공식적으로 그 얼굴을 내외에 들어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그 동안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비워둔 채 국방위원장과 군사 최고사령관의 직함만으로 통치해 오다가 비로소 당총비서에 추대 형식으로 오른 것이다.

15) 박상식(1999),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시아 협력”,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학술세미나, p.3~4 요약.



이어 1998년 9월 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4년만에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계속된 김정일의 승계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은 세대 교체 즉 ‘혁명 2세대’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 사후 1995년 2월 권력서열 3위였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사망 이외에도 김봉률(인민무력부부장, 차수), 김유순(전IOC위원), 이화선(당 조직부 부부장), 강희원(부총리), 박중국(인민무력부 부부장), 주도일(당 군사위원, 차수) 등 50여명의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였고, 더욱이 1997년 2월 황장엽 당비서의 망령에 이어 최광, 김광진의 사망에 이어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등 살아있는 혁명 1세대들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북한의 권력 재편은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혁명 2세대’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0, 60대의 신진 전문관료들이 대거 등용된 내각의 세대교체가 눈에 띄고 있으며, 1997년 대거 교체된 지방행정경제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 등의 중간 관리층과 1998년 전면 교체된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대중 단체의 책임자들은 10년 이상 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특징을 보면 군부의 위상강화이다. 국방위원장이 폐지된 주석직을 대신해 국가 최고 직책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의 면면도 모두 무력과 군수 분야를 담당하는 간부들로 망라돼 있다.<sup>16)</sup> 김정

---

16)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부위원장 김일철(인민무력상), 이용무 차수가 선출되었고, 위원에는 김영춘(총참모장) 차수, 연형묵(자강도당 책임비서), 이을설(호위총국장) 원수, 백학림(사회안전상) 차수, 전병호(군수담당) 비서, 김철만(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차수가 임명됐다.

일은 군부에 의존하여 통치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군부 역시 각종 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위해 총폭탄이 될 것”임을 맹세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해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총참모부 산하 작전국, 총정치국 조직부 산하 당생활지도과, 정보과, 보위사령부 등 4개의 감시조직과 조직지도부를 연결해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전망을 보면 현재 김정일은 정권유지의 핵심변수인 군부를 확고히 장악한 동시에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권력구조는 핵심 권력엘리트의 중점적 지위 보유와 각종 감시기구의 효율적 작동 등으로 반 김정일 세력의 조직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는 김정일을 대체할 인물 또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일 정권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및 이에 따른 여행 통제 와해,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불만 증대, 외부정보 유입 등으로 사회적 응집력 약화의 가속화, 과도한 군수산업 비중, 만성적인 물자부족, 기술 및 설비 낙후 등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단기일 내 경제가 자력에 의해 회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제난 심화와 사회적 결속력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산발적 시위 등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체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로 김정일 유일 체제는 김일성 유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라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저작을 발표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대내외 정책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sup>17)</sup> 그 핵심 내용은 애국애족의 입장 견지, 민족자주의 원칙 고양, 정치·경제 군사역량 강화,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제고,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반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 강화 등이다. 이 저작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수령에 대한 충효성을 강조하여 유일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민족 대단결을 명분으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구사하려는 입장도

---

17) 『로동신문』, 1997년 6월 21일자.

표명되어 있으나, 개혁·개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김정일은 이 저작에서 국가사회제도의 관리와 사회생활 조직에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예속·동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한 점은 김정일 정권의 반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김정일 정권은 결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일이 유일·폐쇄 체제를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외면하는 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기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부분적인 대외 개방 정책 추진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부정보의 유입·확산은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체제개혁 요구의 증대와 불만 확산이 초래되어 소요사태가 빈발하는 한편 핵심 권력층 내에서 김정일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가 고조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정일 정권의 정치변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미 권력핵심을 장악한 군부의 일부 세력이 김정일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요사태의 전국적 확산, 유혈사태의 발생상황에서 권력 핵심세력이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체제붕괴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민중봉기의 확산과정에서 군부의 일부가 가담하여 대정부 물리력의 우세를 점하는 동시에 민중봉기의 확대·심화과정을 통해 기존 북한체제의 전환과 체제 변혁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 2). 김정일 체제의 통일정책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논리는 사회 구성체론에 근거한 전 조선혁명론이다. 분단이후 북한은 사회 구성체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남한사회를 식민

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새조선건설’(한반도에서의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은 통일방법으로서 ‘비평화적 전도’ 즉 군사도발을 통한 무력통일과 ‘평화적 전도’ 즉 남조선혁명을 통한 합작통일의 두 가지가 있음을 주장·실천하였다.

#### 가. 무력통일(1945~1953)

북한은 자체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및 미군 철수가 있게 되자 군사적 수단에 의거한 무력통일(1950. 6.25)을 선택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친북조직 결성과 통일전선 구축을 통해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선동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를 통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 나. 혁명통일(1953~1987)

무력통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북한은 ‘미제국주의와 이에 결탁한 지주·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 타도를 강조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1953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동시적 진행’의 통일관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 민주혁명 이후 북한은 통일과 혁명의 동시적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조선혁명의 구성 부분성과 지역혁명으로서의 상대적 독자성을 규정하고, 남한내 지하혁명당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 인민정권이 수립될 때, 남북한 인민정권간의 합작통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북한은 ‘선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 NLPDR), 후 조국통일’의 통일관을 지속하였다.<sup>18)</sup>

#### 다. 공존통일(1988~현재)

1980년대 후반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통일관에는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하나는 ‘적화통일’보다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

---

18) 허문영(1988),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1호, p.54~55.

한 공존의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1988년 신년사에서부터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초반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의 순서가 ‘선 조국통일, 후 남조선혁명’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설정하고, 「조국통일 5대방침」(1990. 5)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1993. 4)을 제시함으로써 ‘선 조국통일, 후 남조선혁명’ 구상의 편린을 엿보게 하였다. 따라서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선 남북공존, 중 연방통일, 후 남조선혁명’ 구도의 통일관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북한이 무력에 의한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무력 도발사태들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한 군사력 중시노선이 이를 뒷받침한다.<sup>19)</sup>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후 만 3년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자리를 비워둔 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을 앞세워 북한을 통치하다가 1997년 10월 8일 총비서에 추대되었고,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되었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 50돌을 기념하는 1998년 9월 9일 노동신문의 사설에서 김일성 체제의 근본지침이었던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노선을 이어 받아 김정일 체제의 근본지침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남한의 대북 영향력 극소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조성 극대화를 목표로 삼을 것인 바, 대남 정책 근본적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전망되는 북한의 대남 정책 보면 우선 기본방향에서 적대적(갈등적 : conflict) 공존 정책에서 유화적(경쟁적 : competitive)공존 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sup>20)</sup>

---

19) 상계서, p.56.

사안별 정책전망을 보면 첫째, 통일정책에서는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대의 통일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통일논문('97. 8. 4)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칙'·'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통일과정의 강령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총비서 추대이후 김일성 노선을 100% 관철하겠다는 논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김대중정부 출범('98. 2.25)직후 김정일의 「4·18 서한」을 통해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민족대단결 사상'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보완하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sup>21)</sup>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통일분야 지도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김일성 시대의 통일정책을 유훈관철 차원에서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당국간 대화정책을 보면 남한정부 배제정책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의 민중이나 운동권이 아닌 남한 당국을 자신과의 통일 논의 및 협상 주체로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른바 '자주적 입장'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연북 화해정책'으로의 전환과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차적 요구'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도 북한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이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김정일의 기대만큼 진전될 때 남북정상회담 등 양측간 대화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나,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대화 또한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선택할 경우, 북한은 탐색 및 실리획득 차원에서 대화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사망 이후 정권강화 차원에서 대외관계 및 대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남북관

---

20) 상계서, p.68.

21) ①민족자주의 원칙 ②애국애족의 온 민족 단결 ③북남관계 개선 ④외세·반 통일세력 반대 ⑤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정일,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중앙방송」, 1998. 4.29.

계 진전 없이 대미·일 관계 개선과 나진·선봉에의 외자 및 기술유치가 쉽지 않음을 체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 개선과 경제활성화 전략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론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sup>22)</sup>

셋째, 비 당국간 대화정책은 민족성에 기초한 체제수호적 통일전선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국내 친북세력이나 재야운동권을 규합하기 위해 IMF체제로 인한 실업사태와 고물가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배후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수탈이 도사리고 있음을 선전하는 한편, 대북 온건세력과의 접촉·교류를 통한 정치·경제적 실리추구 차원에서 체제수호적 통일전선공작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계급개념에 기초한 하층 및 상층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개념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남 경제정책으로는 상호주의 반발 및 정·경 분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상호주의」 원칙을 ‘전형적 장사꾼의 논리’, ‘반민족적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호상성이 일반 통용되나,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므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에서 연 북 화해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상호주의」 원칙을 흡수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상호주의원칙을 비 등가적, 호혜적, 시차적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적용할 경우 실리추구적 차원에서 북한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한국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단지 남한기업 및 민간단체(비정부기구 및 종교기관 등)들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보장조치를 확보하거나 대미·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대남 군사정책으로는 고성능·소형화 무기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시도

---

22) 허문영(1988), 전거서, p.69~71.

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 등 고성능 무기 및 정권보위를 위한 정밀 소형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할 것이다.

여섯째, 대남 심리전정책은 국론 분열 및 한·미 이간 선동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향후 북한은 IMF 체제하의 실업 및 불황 국면을 활용, 김영삼 정권의 대선 자금, 5·6공 및 문민정부 청산투쟁, 전·노사면 문제, 경제난국 조성 책임자 처벌, 반민족 분자(우익진영) 처벌문제 등을 쟁점화 시키고 관련자 사법처리 등을 제기하며 국론분열을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을 부추겨 김정일 우상화 공세와 더불어 ‘「한총련」 사수,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등 대공수사기관 무력화, 양심수 석방’ 등을 주요 이슈로 설정, 상투적 선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sup>23)</sup>



---

23) 상계서, p.72~76 요약.



### Ⅲ. 조사 방법

####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에서 윤리부장 혹은 윤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중 한사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1998년 12월 5일에 우편으로 하였으며 반송용 우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그 결과 104개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수는 102개였다.

#### 2. 조사도구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통일환경과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미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4개의 항목(통일문제 일반, 한국의 통일환경과 정책, 북한의 통일환경과 정책,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환경)에 걸쳐 22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이 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폐쇄식 질문형을 기본적으로 구성한 후 개방식 질문형을 첨가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모집된 사료의 분석은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백분비(%)와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X^2$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조사결과와 분석

통일의식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는 통일문제 일반,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김정일 체제와 통일정책,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영역별로 순서에 따라 각 영역의 문항들을 분석하되, 첫째, 각 문항들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각 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며, 셋째,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종합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별 분석과 영역별의 통일의식의 종합분석은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X^2$  검증을 하였다.

### 1. 통일문제 일반



통일문제 일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 (문1), (문1-1), (문1-2), (문2), (문3)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91.2%)고 응답하여 통일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을 원하고 있는 이유로서도 한 핏줄, 한 민족이기 때문(68.8%)이라고 답하고 있어 민족의식의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61.8%)라고 보고 있으며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71.6%)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통일의 이유에서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통일후의 이념과 체제에서는 현재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1> 선생님께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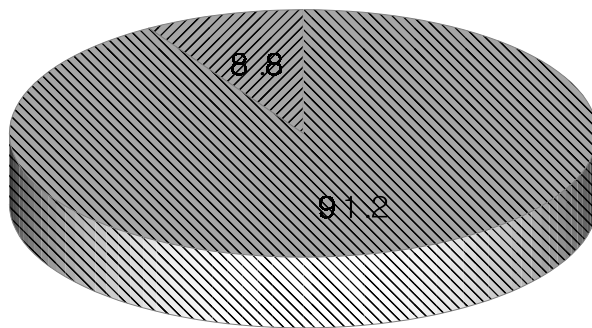
응답자 102명 중 91.2%의 교사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나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8.8%나 나왔다.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 중 68.8%가 한 핏줄,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고 있다. 라고 대답하여 전쟁의 위협(21.5%)이나 경제적 이익(9.7%)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 <표 1-1>, <표 1-2>에서 보듯 남자(95.2%)가 여자(8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② 굳이 할 필요가 없다.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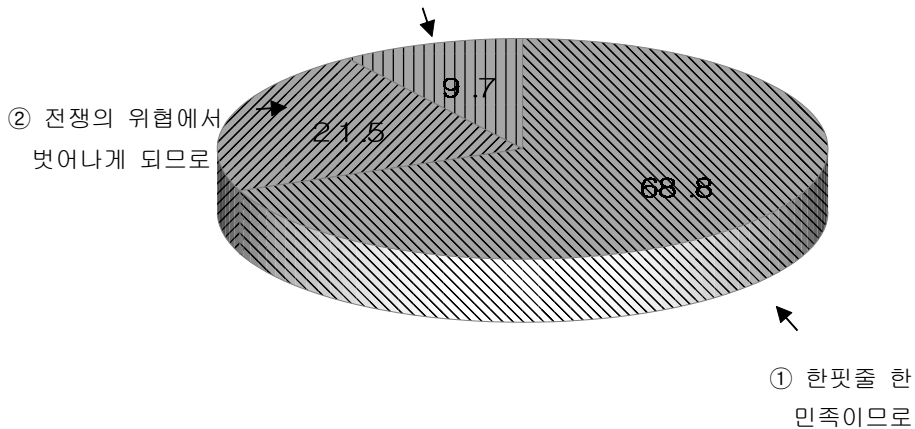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91.2 (93)	95.2 (59)	85 (34)	100 (7)	95.2 (20)	88.6 (31)	88.9 (32)	100 (3)	90.1 (64)	94.4 (17)	92.3 (12)
2	8.8 (9)	4.8 (3)	15 (6)		4.8 (1)	11.4 (4)	11.1 (4)		9.9 (7)	5.6 (1)	7.7 (1)
변인간 차이 검증		df=1 $\chi^2=3.12$ P=0.7731		df=4 $\chi^2=1.93$ P=0.74904					df=2 $\chi^2=0.35$ P=0.83766		
≡답지내용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1로) ② 굳이 할 필요가 없다 (1-2로) ③ 기타 의견( )											



<질문 1-1> 선생님께서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림 1-1>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③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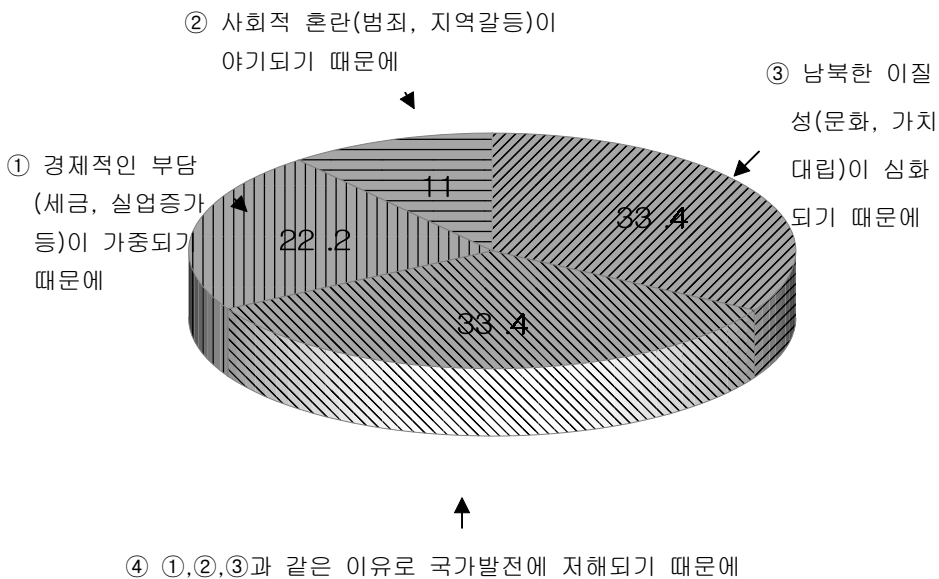


<표 1-1>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93	59	34	7	20	31	32	3	64	17	12
1	68.8 (64)	67.8 (40)	70.6 (24)	71.4 (5)	70 (14)	64.5 (20)	71.9 (23)	66.7 (2)	68.7 (44)	64.7 (11)	75 (9)
2	21.5 (20)	23.7 (14)	17.6 (6)	14.3 (1)	30 (6)	22.6 (7)	15.6 (5)	33.3 (1)	18.8 (12)	35.3 (6)	16.7 (2)
3	9.7 (9)	8.5 (5)	11.8 (4)	14.3 (1)		12.9 (4)	12.5 (4)		12.5 (8)		8.3 (1)
변인간 차이 검증											
☞답지내용 ①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②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③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④ 기타 의견 (        )											

<질문 1-2>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1-2> 통일 불필요의 이유



<표 1-2>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이상
	9	3	6		1	4	4		7	1	1
1	22.2 (2)	66.7 (2)				25 (1)	25 (1)		14.2 (1)		100 (1)
2	11 (1)		16.7 (1)			25 (1)			14.2 (1)		
3	33.4 (3)		50 (3)		100 (1)	50 (2)			42.9 (3)		
4	33.4 (3)	33.3 (1)	33.3 (2)				75 (3)		28.7 (2)	100 (1)	
변인간 차이 검증											
☞답지내용 ① 경제적인 부담(세금, 실업증가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② 사회적 혼란(범죄, 지역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③ 남북한 이질성(문화, 가치대립)이 심화되기 때문에 ④ ①,②,③과 같은 이유로 국가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⑤ 기타 의견											

**<질문 2>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어떠한 상태를 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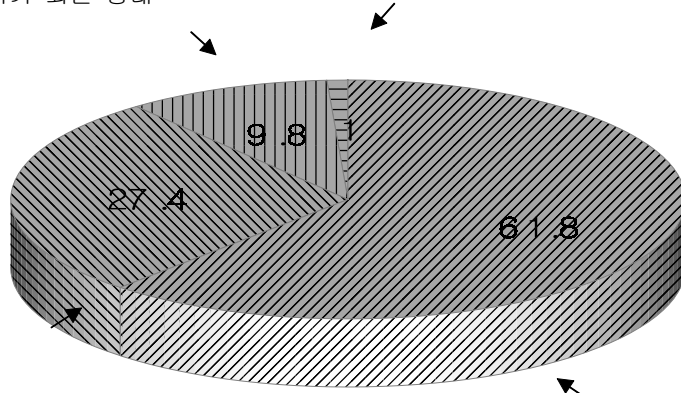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남북한 자유왕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란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27.4%),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61.8%)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경변인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2> 통일의 상태

② 남북이 정치적, 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

④ 기타 의견



①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③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



<표 2>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	27.4 (28)	16.1 (10)	45 (18)	42.9 (3)	28.6 (6)	20 (7)	33.3 (12)		32.4 (23)	11.1 (2)	23.1 (3)
2	9.8 (10)	8 (5)	12.5 (5)		14.3 (3)	11.4 (4)	5.6 (2)	33.3 (1)	9.9 (7)	5.6 (1)	15.4 (2)
3	61.8 (63)	74.3 (46)	42.5 (17)	57.1 (4)	57.1 (12)	65.7 (23)	61.1 (22)	66.7 (2)	56.3 (40)	83.3 (15)	61.5 (8)
4	1 (1)	1.6 (1)				2.9 (1)			1.4 (1)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13.31$ P=0.00400	df=12 $\chi^2=7.44$ P=0.82715	df=6 $\chi^2=7.61$ P=0.26775
⇨답지내용 ①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② 남북이 정치적, 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 ③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 ④ 기타 의견			

**<질문 3>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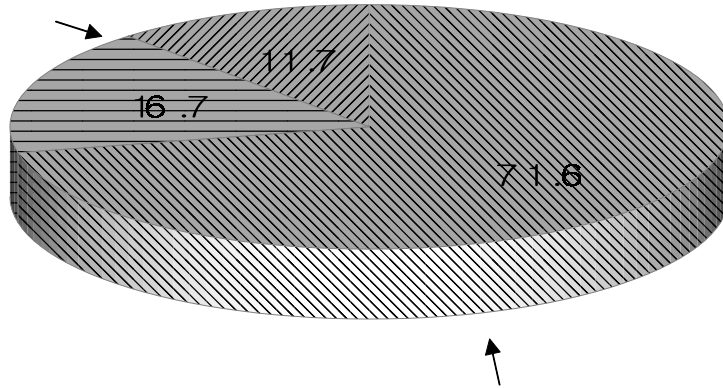
교사들은 통일 한국의 체제로 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교사가 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으나(71.6%), 중국과 홍콩의 통일방식과 같은 1국가 2체제(16.7%), 또는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하여 제3의 체제(11.7%)를 바라고 있는 교사도 소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일관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인 면 등 현실적 차원을 떠나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와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인 경우  $P=0.03085(<0.05)$ 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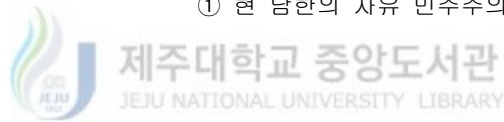
<그림 3>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

③ 중국과 홍콩의  
통일방식과 같은  
1국가 2체제

④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  
하여 제3의 체제



① 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표 3>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71.6 (73)	80.6 (50)	57.5 (23)	57.1 (4)	66.7 (14)	74.3 (26)	72.2 (26)	100 (3)	69 (49)	94.4 (17)	53.8 (7)
2											
3	16.7 (17)	12.9 (8)	22.5 (9)	14.3 (1)	14.3 (3)	17.1 (6)	19.5 (7)		18.3 (13)		30.8 (4)
4	11.7 (12)	6.5 (4)	20 (8)	28.6 (2)	19 (4)	8.6 (3)	8.3 (3)		12.7 (9)	5.6 (1)	15.4 (2)

변인간 차이 검증	df=2 $\chi^2=6.96$ P=0.03085	df=8 $\chi^2=5.06$ P=0.75094	df=4 $\chi^2=7.40$ P=0.11609
☞답지내용 ① 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②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③ 중국과 홍콩의 통일방식과 같은 1국가 2체제 ④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하여 제3의 체제                ⑤ 기타 의견			

## 2.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책의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 통일의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국민정부의 통일정책은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북 및 통일정책도 중요하다(66.6%)라고 대답하고 있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84.3%)로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추진에 대하여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북 투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47.1%),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는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34.3%) 이는 특히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관광사업에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통일에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질문 4>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 들어간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실업자 군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현 정부는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

##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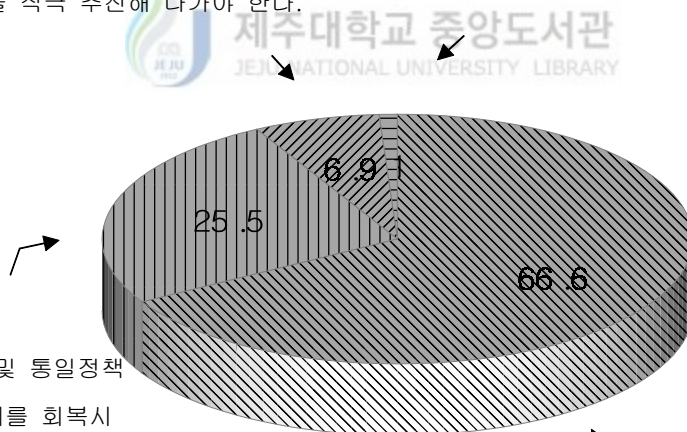
교사들은 현 IMF체제하에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통일정책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북 및 통일정책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금융, 산업정책 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라고 대답한 교사도 상당수 있었지만(25.5%), 대부분의 교사들은 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북 및 통일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똑같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66.6%). 배경변인별로도  $P>0.05$  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 <그림 4> 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③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④ 기타 의견



① 대북 및 통일정책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금융, 산업정책 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②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 및 통일 정책도 중요하다.

<표 4>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25.5 (26)	21 (13)	32.5 (13)	14.3 (1)	28.6 (6)	22.9 (8)	25 (9)	66.7 (2)	23.9 (17)	33.3 (6)	23.1 (3)
2	66.6 (68)	71 (44)	60 (24)	85.7 (6)	66.6 (14)	62.9 (22)	69.4 (25)	33.3 (1)	66.2 (47)	66.7 (12)	69.2 (9)
3	6.9 (7)	8 (5)	5 (2)		4.8 (1)	11.4 (4)	5.6 (2)		8.5 (6)		7.7 (1)
4	1 (1)		2.5 (1)			2.9 (1)			1.4 (1)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4.36$ P=0.22487		df=12 $\chi^2=9.89$ P=0.62564					df=6 $\chi^2=2.39$ P=0.88031		
⇨답지내용 ① 대북 및 통일정책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금융, 산업정책 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②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 및 통일정책도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을 똑같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④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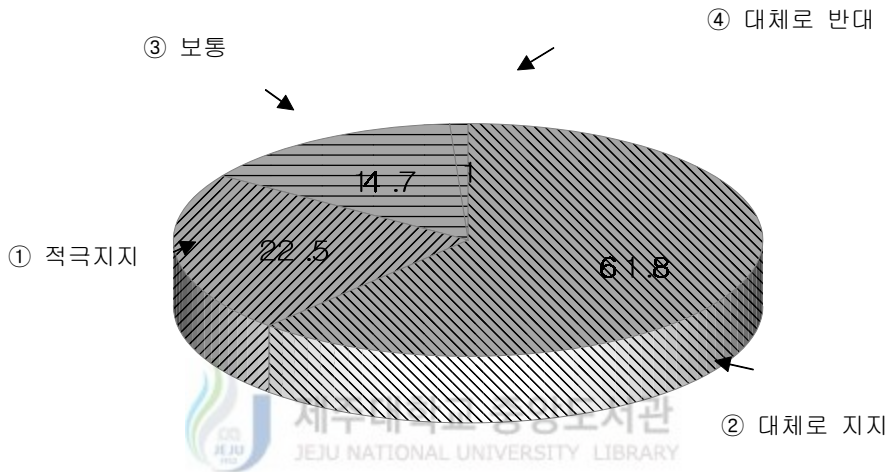
<질문 5> 현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실현 등을 대북 정책의 3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들(84.3%)이 지지를 하고 있다. (적극지지 22.5%, 대체로 지지 61.8%) 이는 대북 정책을 정권 유지 차원으로 이용하였던 과거의 정부와는 궤도를 달리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감이 대단하고 현정부의 햇빛정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지지율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림 5>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3원칙



<표 5>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22.5 (23)	25.8 (16)	17.5 (7)		23.8 (5)	28.6 (10)	22.2 (8)		25.3 (18)	11.1 (2)	23.1 (3)
2	61.8 (63)	59.7 (37)	65 (26)	57.1 (4)	66.7 (14)	60 (21)	61.1 (22)	66.7 (2)	59.2 (42)	66.7 (12)	69.2 (9)
3	14.7 (15)	12.9 (8)	17.5 (7)	42.9 (3)	9.5 (2)	11.4 (4)	13.9 (5)	33.3 (1)	15.5 (11)	16.7 (3)	7.7 (1)
4	1 (1)	1.6 (1)					2.8 (1)			5.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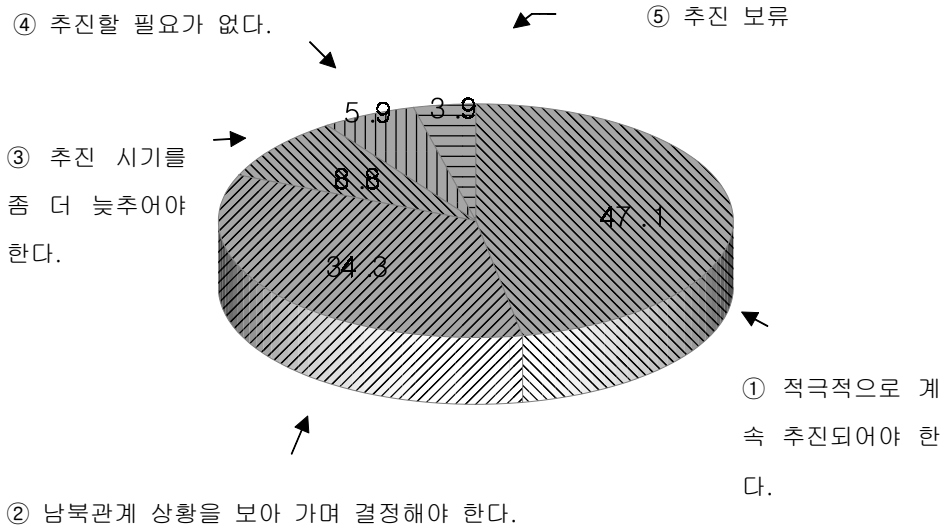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1.85$ P=0.60411	df=12 $\chi^2=9.94$ P=0.62114							df=6 $\chi^2=6.74$ P=0.34581	
◀답지내용 ① 적극지지 ② 대체로 지지 ③ 보통 ④ 대체로 반대 ⑤ 적극반대										

**<질문 6> 민간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는 만큼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수의 의견으로 추진상황의 연기(8.8%), 추진할 필요가 없다(5.9%), 국내 및 제주의 관광사업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3.9%). 라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북 투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47.1%)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는 만큼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34.3%). 이는 특히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관광사업에 거의 확실하게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6>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표 6>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34.3 (35)	35.5 (22)	32.5 (13)	42.9 (3)	33.3 (7)	34.3 (12)	33.3 (12)	33.4 (1)	33.8 (24)	38.9 (7)	30.8 (4)
2	47.1 (48)	46.8 (29)	47.5 (19)	42.9 (3)	47.6 (10)	51.4 (18)	47.3 (17)		47.9 (34)	38.9 (7)	53.8 (7)
3	8.8 (9)	11.3 (7)	5 (2)	14.2 (1)	9.5 (2)	5.7 (2)	8.3 (3)	33.3 (1)	5.6 (4)	22.2 (4)	7.7 (1)
4	5.9 (6)	3.2 (2)	10 (4)		4.8 (1)	8.6 (3)	2.8 (1)	33.3 (1)	8.5 (6)		
5	3.9 (4)	3.2 (2)	5 (2)		4.8 (1)		8.3 (3)		4.2 (3)		7.7 (1)

변인간 차이 검증	df=4 $\chi^2=3.25$ P=0.51720	df=16 $\chi^2=14.79$ P=0.53988	df=8 $\chi^2=8.87$ P=0.35345
<p>☞답지내용</p> <p>① 시범적 남북경협 사업으로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의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②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되, 계속 추진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해야 한다. ③ 현 국내외 및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추진 시기를 좀 더 늦추어야 한다. ④ 현 IMF상황 및 북한측 태도를 감안할 때 추진할 필요가 없다. ⑤ 특히 제주를 비롯한 국내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보류되어야 한다. ⑥ 기타 의견</p>			

### 3. 김정일 체제와 통일정책

북한은 지난해 9월 5일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하여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데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안보상 적대 대상이지만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61.6%),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59.8%) 또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이 전쟁도발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58.8%나 나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교사들이 김정일 체제의 출범이 현재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55.9%), 향후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은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라고 응답한 교사가 많아(49%)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최근의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 또한 상반되는 태도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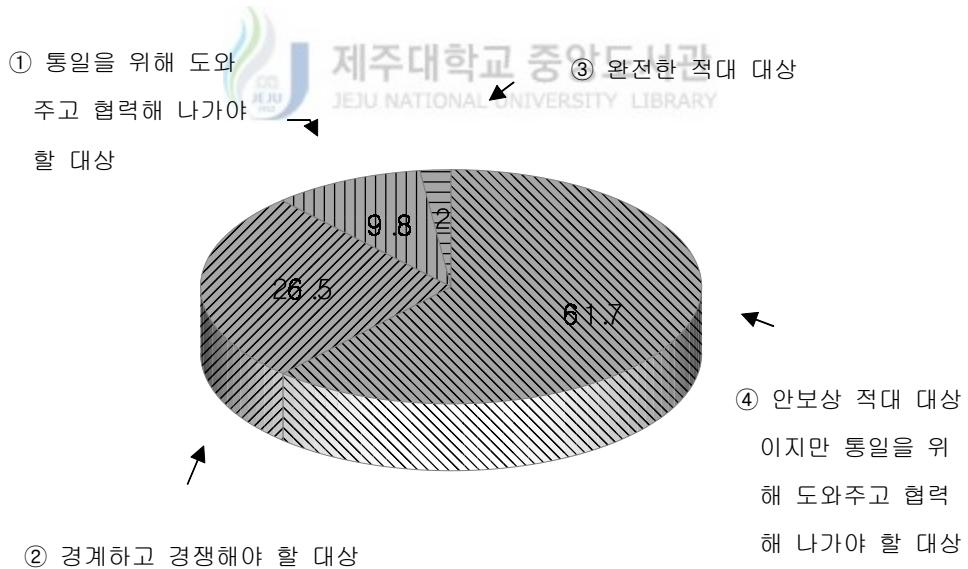


<질문 7>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을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을 완전한 적대(2%) 및 경계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26.5%)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도 다수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71.5%)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자 교사보다 여자 교사가, 연령별로는 젊은 교사일수록,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는 담당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극적이며 북한에 대해 관대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에 대한 견해



<표 7>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9.8	11.3	7.5	14.3	14.3	5.7	11.1		9.8	16.7	
	(10)	(7)	(3)	(1)	(3)	(2)	(4)		(7)	(3)	
2	26.5	29	22.5	14.3	28.6	22.9	27.8	66.7	26.8	22.2	30.8
	(27)	(18)	(9)	(1)	(6)	(8)	(10)	(2)	(19)	(4)	(4)
3	2	3.2				2.8	2.8		1.4	5.5	
	(2)	(2)				(1)	(1)		(1)	(1)	
4	61.7	56.5	70	71.4	57.1	68.6	58.3	33.3	62	55.6	69.2
	(63)	(35)	(28)	(5)	(12)	(24)	(21)	(1)	(44)	(10)	(9)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1.95$ P=0.58382		df=12 $\chi^2=6.95$ P=0.86086					df=6 $\chi^2=7.26$ P=0.29731			
☞답지내용											
①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 ② 경계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 ③ 완전한 적대 대상 ④ 안보상 적대 대상이지만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 ⑤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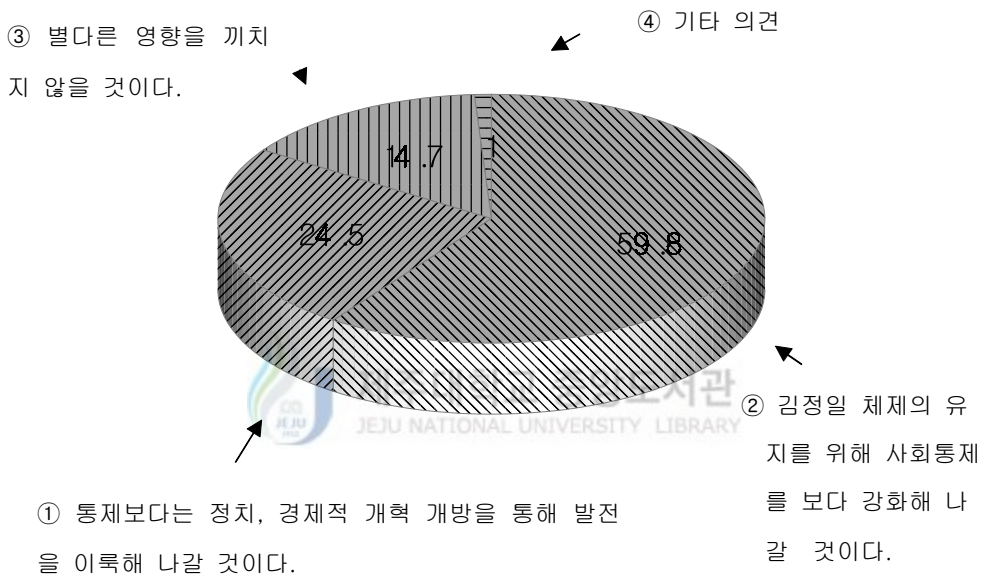
<질문 8>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으로 앞으로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은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제보다는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응답한 교사도 24.5%나 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59.8%). 그리고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14.7%나 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지난 9월 5

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8>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북한 체제



<표 8>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24.5 (25)	21 (13)	30 (12)	14.3 (1)	33.3 (7)	22.9 (8)	22.2 (8)	33.3 (1)	25.4 (18)	27.8 (5)	15.4 (2)

2	59.8 (61)	59.7 (37)	60 (24)	71.4 (5)	52.4 (11)	54.3 (19)	66.7 (24)	66.7 (2)	56.3 (40)	61.1 (11)	76.9 (10)
3	14.7 (15)	19.3 (12)	7.5 (3)	14.3 (1)	9.5 (2)	22.8 (8)	11.1 (4)		16.9 (12)	11.1 (2)	7.7 (1)
4	1 (1)		2.5 (1)		4.8 (1)				1.4 (1)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5.16$ P=0.16033		df=12 $\chi^2=8.73$ P=0.72612					df=6 $\chi^2=2.79$ P=0.83493			
<p>☞답지내용</p> <p>① 통제보다는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②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p> <p>③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④ 기타 의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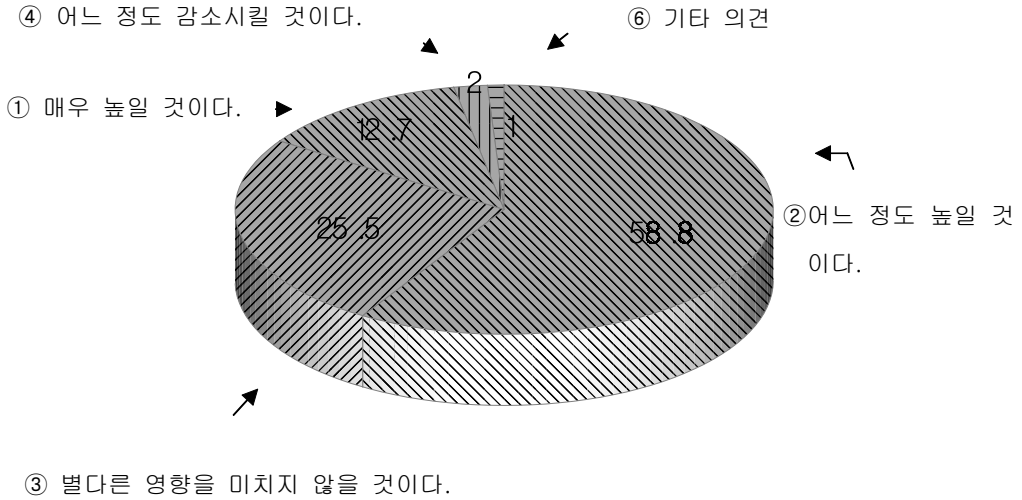


**<질문 9> 북한이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추대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일이 국가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25.5%인 반면, 전쟁의 가능성을 매우 높일 것이다(12.7%). 전쟁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다(58.8%) 라는 등 전쟁도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또한 교사들이 북한 김정일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추구와 관련하여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담당 사무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와 전쟁도발 가능성



<표 9>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12.7 (13)	14.5 (9)	10 (4)		23.8 (5)	8.6 (3)	11.1 (4)	33.3 (1)	8.4 (6)	16.7 (3)	30.8 (4)
2	58.8 (60)	56.5 (35)	62.5 (25)	42.9 (3)	52.3 (11)	62.9 (22)	63.9 (23)	33.4 (1)	60.6 (43)	55.5 (10)	53.8 (7)
3	25.5 (26)	27.4 (17)	22.5 (9)	57.1 (4)	14.3 (3)	25.7 (9)	25 (9)	33.3 (1)	26.8 (19)	27.8 (5)	15.4 (2)
4	2 (2)	1.6 (1)	2.5 (1)		4.8 (1)	2.8 (1)			2.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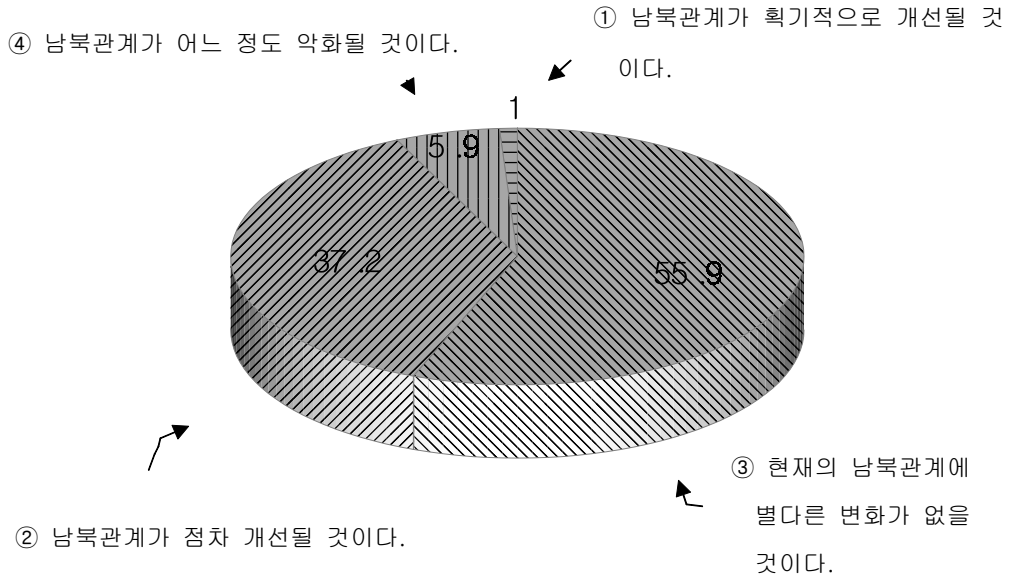
5										
6	1 (1)	2.5 (1)		4.8 (1)				1.4 (1)		
변인간 차이 검증	df=4 $X^2=2.57$ P=0.63167		df=16 $X^2=14.94$ P=0.52870				df=8 $X^2=5.61$ P=0.69054			
<p>☞답지내용</p> <p>① 전쟁도발 가능성을 매우 높일 것이다. ② 전쟁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다. ③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 전쟁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⑤ 전쟁도발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⑥ 기타 의견</p>										

**<질문 10>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한 교사들의 시각의 차이가 많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55.9%나 나왔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38.2%(① 1%, ② 37.2%)나 되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소수이기는 하나 5.9%가 나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 연령별, 윤리담당 사무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설문 결과 역시 앞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는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류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질문 11>의 결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향후 남북관계



<표 10>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	1 (1)	1.6 (1)					2.8 (1)				7.7 (1)
2	37.2 (38)	40.3 (25)	32.5 (13)	14.3 (1)	38.1 (8)	34.3 (12)	44.4 (16)	33.3 (1)	35.2 (25)	38.9 (7)	46.1 (6)
3	55.9 (57)	51.6 (32)	62.5 (25)	71.4 (5)	57.1 (12)	60 (21)	50 (18)	33.4 (1)	60.6 (43)	55.6 (10)	30.8 (4)
4	5.9 (6)	6.5 (4)	5 (2)	14.3 (1)	4.8 (1)	5.7 (2)	2.8 (1)	33.3 (1)	4.2 (3)	5.5 (1)	15.4 (2)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1.22$ P=0.74727	df=12 $\chi^2=9.41$ P=0.66780							df=6 $\chi^2=11.05$ P=0.08671	
◀답지내용  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②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③ 현재의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다. ⑤ 기타 의견										

**<질문 11>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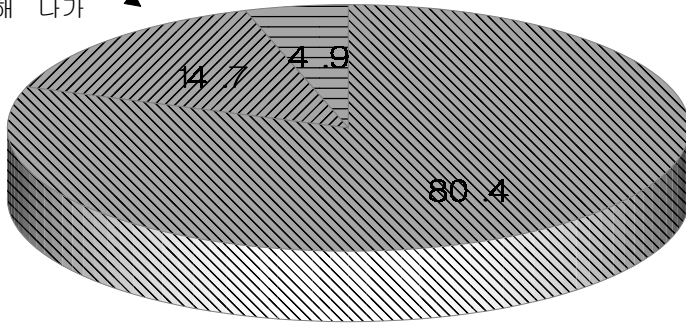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보다 강경한 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4.9%) 압도적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95.1%)(①14.7%, ②80.4%). 이것은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 남해안 간첩 침투 사건, 미사일 발사(자칭 인공위성) 사건, 반 잠수정 격침 사건 등 강경대응의 불씨를 북한이 제공했어도 교사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은 강경대응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햇빛정책과 같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포용 쪽의 의견이 많았다고 분석이 된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11>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에 대응한 대북 정책

① 보다 유연한 쪽으로 일관성 있는 포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③ 보다 강경한 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②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간다



<표 11>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14.7 (15)	17.7 (11)	10 (4)	28.6 (2)	19.1 (4)	17.1 (6)	8.3 (3)		12.7 (9)	22.2 (4)	15.4 (2)
2	80.4 (82)	79.1 (49)	82.5 (33)	71.4 (5)	71.4 (15)	82.9 (29)	83.4 (30)	100 (3)	80.3 (57)	77.8 (14)	84.6 (11)
3	4.9 (5)	3.2 (2)	7.5 (3)		9.5 (2)		8.3 (3)		7 (5)		
4											

변인간 차이 검증	df=2 $\chi^2=2.34161$ P=0.31012	df=8 $\chi^2=6.32$ P=0.61151	df=4 $\chi^2=2.84$ P=0.58441
<p>☞답지내용</p> <p>① 보다 유연한 쪽으로 일관성 있는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p> <p>②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간다.</p> <p>③ 보다 강경한 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④ 기타 의견</p>			

**<질문 12>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은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문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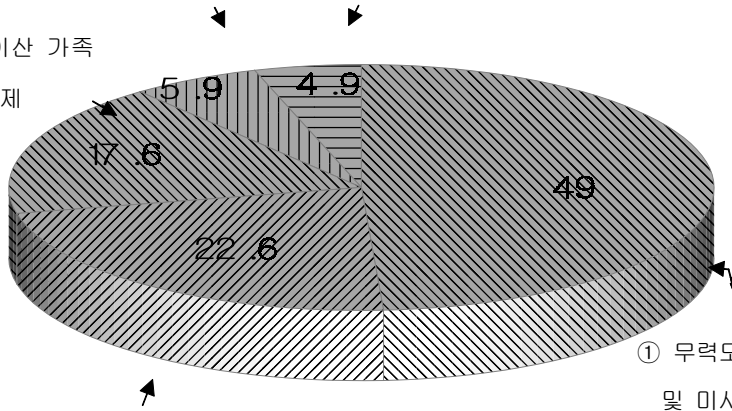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 문제(22.6%),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17.6%),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 문제(5.9%), 남북한 특사 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4.9%)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12>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

- ④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 문제                      ⑤ 남북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

- ②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



- ①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

- ③ 남북 교류협력 확대 문제



<표 12>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	49 (50)	41.9 (26)	60 (24)	57.1 (4)	52.4 (11)	42.9 (15)	52.8 (19)	33.4 (1)	47.9 (34)	50 (9)	53.9 (7)
2	17.6 (18)	19.4 (12)	15 (6)	14.3 (1)	19 (4)	14.3 (5)	22.2 (8)		15.5 (11)	22.2 (4)	23 (3)
3	22.6 (23)	25.8 (16)	17.5 (7)	14.3 (1)	14.3 (3)	40 (14)	11.1 (4)	33.3 (1)	25.4 (18)	16.7 (3)	15.4 (2)
4	5.9 (6)	9.7 (6)			4.8 (1)	2.8 (1)	8.3 (3)	33.3 (1)	7 (5)		7.7 (1)
5	4.9 (5)	3.2 (2)	7.5 (3)	14.3 (1)	9.5 (2)		5.6 (2)		4.2 (3)	11.1 (2)	

6										
변인간 차이 검증	df=4 $\chi^2=6.95$ P=0.13872	df=16 $\chi^2=18.2$ P=0.27816							df=8 $\chi^2=5.22$ P=0.73428	
⇨답지내용 ①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③ 남북 교류협력 확대 문제    ④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 문제    ⑤ 남북한 특 사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    ⑥ 기타 의견										

<질문 13> 최근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자칭 인공위성 발사), 영변 핵 시설 의혹 등 군사적인 모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들이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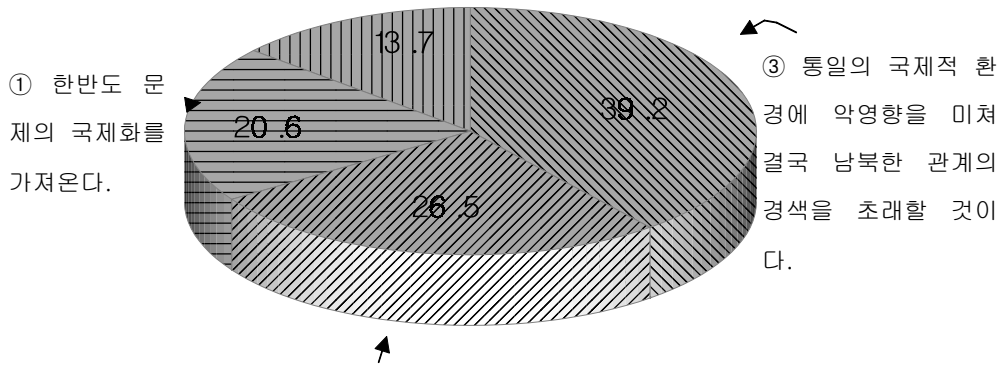
북한의 군사적 모험이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사일 발사(자칭 인공위성 발사), 영변 핵 시설 의혹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하여는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결국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것이다(39.2%).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다(26.5%).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가져온다(20.6%). 통일의 국제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남북관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13.7%) 순으로 나타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13> 북한의 군사적 모험과 통일환경에의 영향

④ 통일의 국제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남북 관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②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다.

<표 13>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20.6 (21)	17.7 (11)	25 (10)	28.6 (2)	19 (4)	14.3 (5)	27.8 (10)		22.5 (16)	11.1 (2)	23.1 (3)
2	26.5 (27)	32.3 (20)	17.5 (7)	28.6 (2)	23.8 (5)	22.9 (8)	25 (9)	100 (3)	22.5 (16)	44.5 (8)	23.1 (3)
3	39.2 (40)	33.9 (21)	47.5 (19)	42.8 (3)	47.7 (10)	37.1 (13)	38.9 (14)		38.1 (27)	33.3 (6)	53.8 (7)
4	13.7 (14)	16.1 (10)	10 (4)		9.5 (2)	25.7 (9)	8.3 (3)		16.9 (12)	11.1 (2)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3.81$ P=0.28283		df=12 $\chi^2=17.03032$ P=0.14846					df=6 $\chi^2=7.27$ P=0.29647		

☞답지내용

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가져온다. ②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다. ③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것이다. ④ 통일의 국제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남북관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⑤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도, 남북한 관계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⑥ 기타 의견

#### 4.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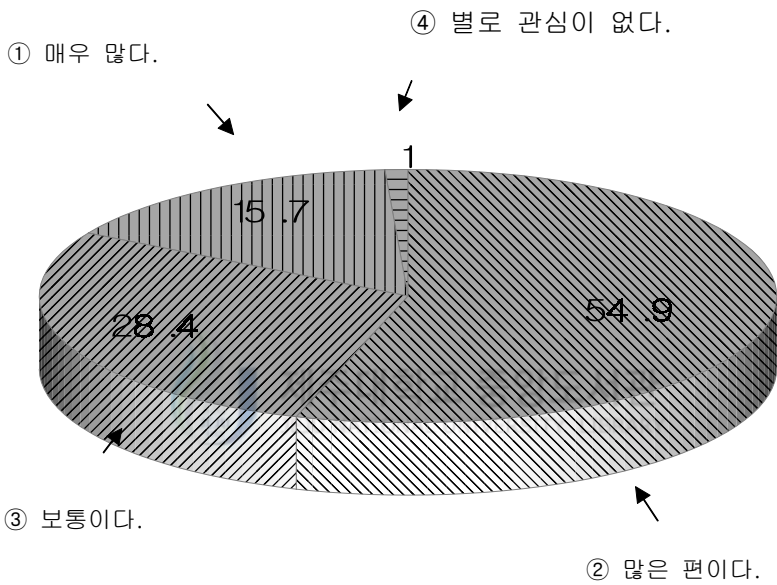
교사들의 일반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대단히 많은 편이며(70.6%),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도 과거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나 반공, 승공이 아닌 남북이 하나라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48%),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은 신문이나 TV 등 일반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는다(86.2%)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며 교사들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점을 꼽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교사주도의 설명식 수업과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론식 수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8%)

**<질문 14> 선생님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까?**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편이며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다(54.9%). 보통이다(28.4%). 매우 많다(15.7%). 별로 관심이 없다(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배경변인별로 보

면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가, 연령별로는 젊은 교사일수록, 윤리사무 담당 기간 별로는 담당기간이 짧을수록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편이며 20대, 30대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14>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표 14>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15.7 (16)	21 (13)	7.5 (3)		19 (4)	20 (7)	11.1 (4)	33.3 (1)	15.5 (11)	16.7 (3)	15.4 (2)
2	54.9 (56)	59.7 (37)	47.5 (19)	14.3 (1)	28.6 (6)	65.7 (23)	66.7 (24)	66.7 (2)	46.5 (33)	72.2 (13)	76.9 (10)

3	28.4 (29)	19.3 (12)	42.5 (17)	71.4 (5)	52.4 (11)	14.3 (5)	22.2 (8)		36.6 (26)	11.1 (2)	7.7 (1)
4	1 (1)		2.5 (1)	14.3 (1)					1.4 (1)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9.60$ P=0.02230		df=12 $\chi^2=35.39$ P=0.00041					df=6 $\chi^2=9.04$ P=0.17136			
☞답지내용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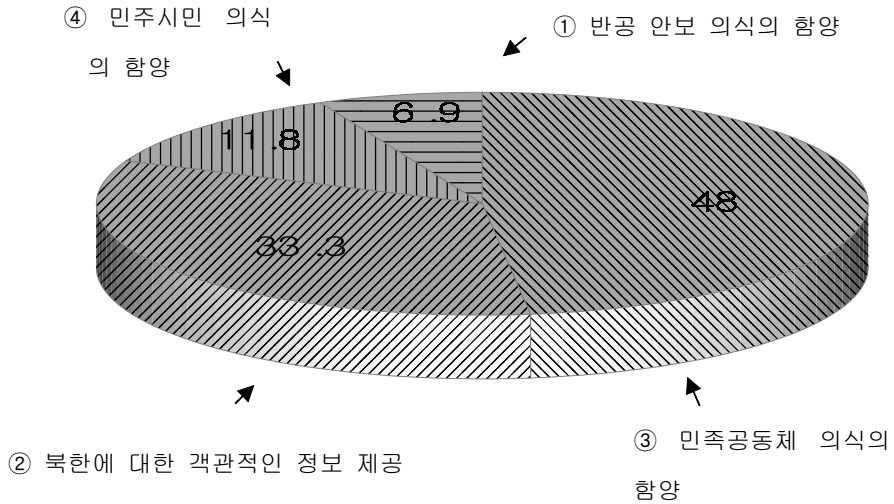
<질문 15>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서는 민족 공동체 의식함양에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48%였으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33.3%,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11.8%, 반공 안보 의식의 함양 6.9% 순으로 나타나 과거의 안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함양에 주력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거짓없이, 꾸밈없이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15>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



<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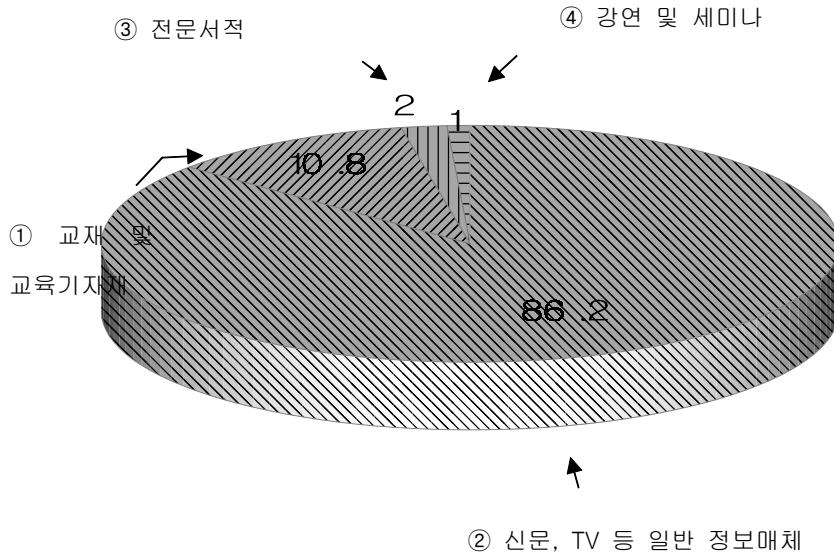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6.9 (7)	6.5 (4)	7.5 (3)			2.8 (1)	16.7 (6)		4.2 (3)	11.1 (2)	15.4 (2)
2	33.3 (34)	32.2 (20)	35 (14)	42.9 (3)	52.4 (11)	31.4 (11)	25 (9)		32.4 (23)	38.9 (7)	30.8 (4)
3	48 (49)	50 (31)	45 (18)	57.1 (4)	47.6 (10)	57.1 (20)	33.3 (12)	100 (3)	53.5 (38)	27.8 (5)	46.1 (6)
4	11.8 (12)	11.3 (7)	12.5 (5)			25.7 (3)	25 (9)		9.9 (7)	22.2 (4)	7.7 (1)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0.25$ P=0.96904	df=12 $\chi^2=25.59$ P=0.01224	df=6 $\chi^2=6.85$ P=0.33519
□답지내용 ① 반공 안보 의식의 함양                      ②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③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④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⑤ 기타 의견			

**<질문 16> 선생님은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신문이나 TV 등 일반 정보매체를 통하여 교육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86.2%) 그밖에 교재 및 교육기자재(10.8%)나 전문서적(2%), 그리고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하여(1%)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소수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체계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나 정보를 주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이와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배경변인별로도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윤리사무 담당 교사들 마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6>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획득수단



<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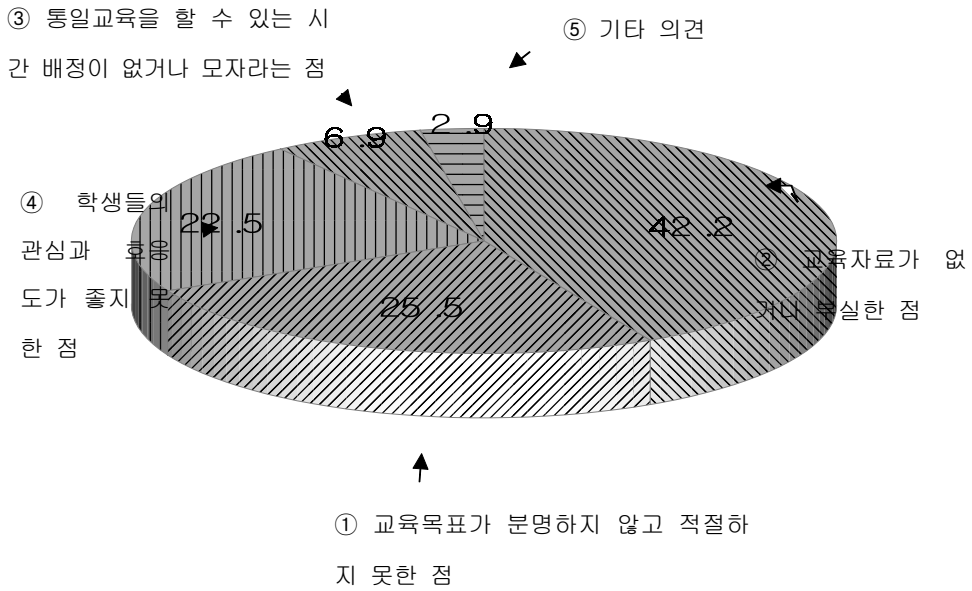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3
1	10.8 (11)	12.9 (8)	7.5 (3)		9.5 (2)	11.4 (4)	13.9 (5)		11.3 (8)	11.1 (2)	7.7 (1)
2	86.2 (88)	82.3 (51)	92.5 (37)	100 (7)	90.5 (19)	83 (29)	83.3 (30)	100 (3)	85.9 (61)	88.9 (16)	84.6 (11)
3	2 (2)	3.2 (2)				2.8 (1)	2.8 (1)		1.4 (1)		7.7 (1)
4	1 (1)	1.6 (1)				2.8 (1)			1.4 (1)		
5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2.50$ P=0.47543	df=12 $\chi^2=4.52$ P=0.97206	df=6 $\chi^2=3.18$ P=0.78534
⇨답지내용 ① 교재 및 교육기자재      ② 신문, TV 등 일반 정보매체 ③ 전문서적      ④ 강연 및 세미나      ⑤ 기타			

**<질문 17> 현재 학교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은 현재 학교 통일교육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서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점(42.2%)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고,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점(25.5%),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좋지 못한 점(22.5%),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없거나 모자라는 점(6.9%), 그리고 기타 2.9%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대북 관련 정보 및 통일관련 교육자료 제공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능력에 따라 주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호를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 유지에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현재 일반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는 정보내용이 다름으로 인해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학생들의 혼돈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현 학교 통일교육의 당면 문제



<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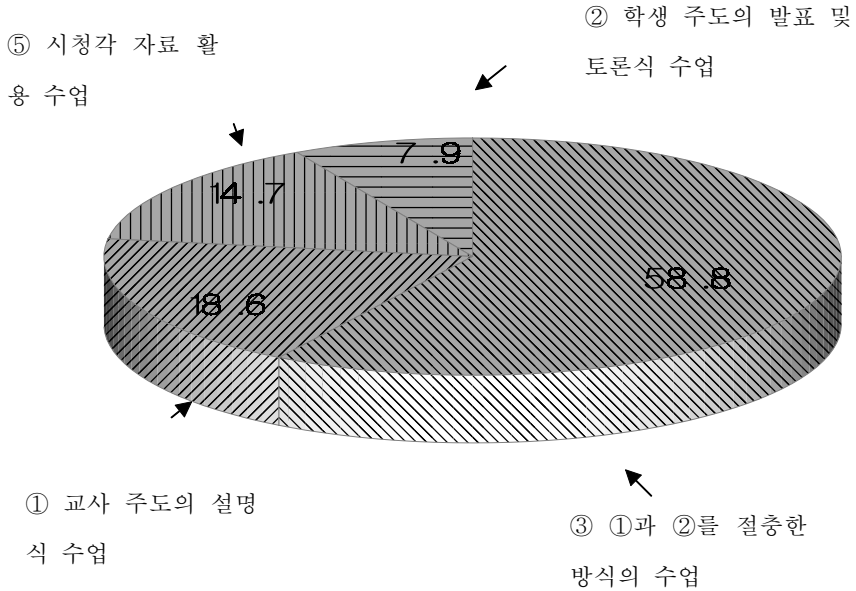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	25.5 (26)	21 (13)	32.5 (13)	28.6 (2)	23.8 (5)	22.9 (8)	27.8 (10)	33.3 (1)	22.5 (16)	38.9 (7)	23.1 (3)
2	42.2 (43)	41.9 (26)	42.5 (17)	42.8 (3)	57.1 (12)	48.6 (17)	27.8 (10)	33.4 (1)	48 (34)	27.8 (5)	30.7 (4)
3	6.9 (7)	9.7 (6)	2.5 (1)			11.4 (4)	8.3 (3)		4.2 (3)	11.1 (2)	15.4 (2)
4	22.5 (23)	25.8 (16)	17.5 (7)	14.3 (1)	19.1 (4)	17.1 (6)	30.5 (11)	33.3 (1)	22.5 (16)	16.7 (3)	30.8 (4)
5	2.9 (3)	1.6 (1)	5 (2)	14.3 (1)			5.6 (2)		2.8 (2)	5.5 (1)	

변인간 차이 검증	df=4 $\chi^2=4.44$ P=0.34861	df=16 $\chi^2=13.92$ P=0.60488	df=8 $\chi^2=6.93$ P=0.54454
□답지내용 ①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점      ②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점 ③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없거나 모자라는 점 ④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좋지 못한 점      ⑤ 기타 의견			

**<질문 18> 선생님께서 북한 및 통일교육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과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론식 수업을 절충한 방식의 수업을 한다는 대답이 58.8%가 되었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18.6%,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14.7%,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론식 수업이 7.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교수방법은 주로 교사의 설명과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통일교육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활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18> 통일교육의 교수방법



<표 18>

	전체	성별		연령별					윤리사무 담당 기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2년	3~5년	5년 이상
		102	62	40	7	21	35	36	3	71	18
1	18.6 (19)	22.6 (14)	12.5 (5)	57.1 (4)	14.3 (3)	14.3 (5)	19.4 (7)		15.5 (11)	16.7 (3)	38.5 (5)
2	7.9 (8)	8.1 (5)	7.5 (3)	14.3 (1)		11.4 (4)	5.6 (2)	33.3 (1)	9.8 (7)	5.5 (1)	
3	58.8 (60)	54.8 (34)	65 (26)	28.6 (2)	76.2 (16)	54.3 (19)	61.1 (22)	33.4 (1)	73.2 (52)	61.1 (11)	53.8 (7)
4											
5	14.7 (15)	14.5 (9)	15 (6)		9.5 (2)	20 (7)	13.9 (5)	33.3 (1)	15.5 (11)	16.7 (3)	7.7 (1)

변인간 차이 검증	df=3 $\chi^2=1.77$ P=0.62216	df=12 $\chi^2=17.49$ P=0.13223	df=6 $\chi^2=5.25$ P=0.51234
<p>☞답지내용</p> <p>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                      ②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론식 수업</p> <p>③ ①과 ②를 절충한 방식의 수업                ④ 역할극 수업</p> <p>⑤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⑥ 기타 의견</p>			





## V 결론 : 요약 및 제언

1998년 2월 한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 역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김정일 체제가 성립되는 등 남북한 모두 과거와는 다른 정부가 들어섰고, 따라서 통일정책도 많이 달라졌다. 크게 달라진 통일정책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데 기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 상황, 국제적 요인, 국민들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통일 의식도 변해야 할뿐만 아니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사들의 의식이 제대로 반영된 교육방법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여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통일관,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김정일 체제와 통일정책,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이라는 네 가지의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문제 일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하며 통일관도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의 형태도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통일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문1), (문1-1), (문1-2), (문2), (문3)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91.2%)라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을 원하고 있는 이유로서도 한 뗏줄, 한 민족이기 때문(68.8%)이라고 답하고 있어 민족의식의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61.8%)라고 보고 있으며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71.6%)를 바라고

있다.

둘째,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 통일의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수행은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북 및 통일정책도 중요하다(66.6%)라고 대답하고 있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84.3%) 높은 편이다. 또한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추진에 대하여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북 투자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47.1%),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의미가 있는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34.3%) 이러한 결과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동포애와 수준 높은 통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전한 이해와 적극적 지지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셋째, 북한은 지난해 9월 5일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하여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는데 그와 관련된 제반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안보상 적대 대상이지만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61.6%),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59.8%) 또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이 전쟁도발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58.8%나 나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교사들이 김정일 체제의 출범이 현재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55.9%), 향후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은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라고 응답한 교사가 많아(49%)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최근의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행동에 주시의 시각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체제와 그 통일정

책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이 보여주는 일면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것 같은 의식은 김정일 체제가 아직은 불투명하고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며(70.6%), 구체적으로 들어가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과거와 같이 남북한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48%).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은 신문이나 TV등 일반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는다(86.2%)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며,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역시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점을 꼽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교사주도의 설명과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론을 혼합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8%) 한국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앞서의 통일의식에 비해 소극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되는데 따라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당국과 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사와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통일교육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사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사들은 주어진 자료를 수동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그를 교육시키려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교사들이 높은 통일의식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교수-학습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교육목표의 설정과 내용의 선정·조직에 교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교사들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부족한 교사 층이 있는데 이들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 통일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면 하나는 남북한 특히 북한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공받지 못하여 구태 의연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인 대중매체의 자료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일 체제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전망 등은 자료를 바로 얻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다. 자료의 개발과 보급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계기와 수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성준(1992),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대왕사.
- 김일무(1995),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 대왕사.
- 김학준(1995),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 김한교 외(1986), 『한반도의 통일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민병천 편(1990), 『전환기의 통일문제』, 대왕사.
- 민족통일연구원(1997),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 (1998),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 (1998),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 박경서(1997),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 박영호 외(1997),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 박형중(1998),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 송 자 외(1996), 『통일사회로 가는 길』, 오름.
- 신정현(1989),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 아태평화재단(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 양영식(1997), 『통일정책론』, 박영사.
- 양호민 외(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옥태환·김수암(1997), 『통일한국의 위상』, 민족통일연구원
- 이상우 편저(1998),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I-제국의 전략구상』, 도서출판 오름사.
- 평화문제연구소(1994),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연구소.
- 평화문제연구소(1997), 『통일문제연구』 제9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 통일부(1998), 『국민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부.

통일교육원(1996),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원.

한만길 외(1997),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논문>

강정윤(1998),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성준(1998),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대북 정책의 과제”, 『새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대학 세미나.

고성효(199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시홍(1986), “제주도 초·중·고 교원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도태·조민(1999), “새정통일정책의 추진기조와 개선 및 보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김태희(1998), “북한 장래의 9가지 시나리오”, 『자유공론』 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

김항원·강근형(199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김희(1993),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도순(1995),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교육방안” 『통일논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진환(1994),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종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일원.
- 송영대(1997),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97재외동포 초청 세미나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 안후찬(1996),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행정대학원.
- 양영식(1998), “대북 정책의 방향: 추진방향과 과제”, 『오늘의 북한과 민족 통일의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세미나.
- (1995), “남북한의 통일 정책”, 『민주통일론』, 통일연구원.
- 온창일(1998), “김정일은 다시 전복전을 꿈꾸고 있다.”, 『자유공론』 6월호,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
- 이광희(1998),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일(1994),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 응(1997), “북한의 권력변동과 통일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총서3, 도서출판 오름.
- 최 성(1997),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추진방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월호.
- 최은수(1988),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산학술논총」, 제5집, 도산아카데미연구원.
- 최성복(1995),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 허문영(1988),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Summary>

##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 of the Unification Policy and the Perceptions about Unification

- The target of research :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Cheju  
Island-

Kim, Ki-Wa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upervised by Profressor Yang, Bang-Ju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nification policy and education are very important this moment to re-unify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the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changed a lot from ideologies to realities. Educational conditions about unification have been changing gradually. Especially in elementary school the perception of teachers about unific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ight educational plan and practice of unification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nd educational situation of elementary school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I ha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run parallel the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ies. In the case of empirical study I adopted a questionnaire.

The finding of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Cheju Island have very strong national mind. They think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united in one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And they strongly want the democratic system after unification.

Second, They very much agreed with 'Sunshine Policy' of President Kim Dae-Jung even in IMF situation.

Third, They said although we are against North Korea for security reasons, we should help and cooperate with them for re-unification.

Fourth, the teachers respond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each students about unification is not to emphasize the anti-communist but to promote the concept that South and North Korea are one people.

As a result, for right teaching about unification, I suggest first, teachers should take part in arranging the curriculum about unification actively and second, the educational conditions need to be developed quickly to obtain organized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unification.

# 부 록



# 설문지

아동 교육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김기완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의식 조사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아보고자 윤리담당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그냥 빈칸으로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김기완

## 통일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

※동의하시는 번호 위에 ✓하시거나 ( )에 간단히 써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1로)
- ② 굳이 할 필요가 없다 (1-2로)
- ③ 기타 의견( )

1-1. (문1에서 ①항에 응답한 분만 해당)

선생님께서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 ②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 ③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 ④ 기타 의견 ( )

1-2. (문1에서 ②항에 응답한 분만 해당)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인 부담(세금, 실업증가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 ② 사회적 혼란(범죄, 지역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 ③ 남북한 이질성(문화, 가치대립)이 심화되기 때문에
- ④ ①,②,③과 같은 이유로 국가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 ⑤ 기타 의견 ( )

2.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까?

- ①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 ② 남북이 정치적, 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
- ③ 남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
- ④ 기타 의견 ( )

3.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 ①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 ②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 ③ 중국과 홍콩의 통일방식과 같은 1국가 2체제
- ④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하여 제3의 체제
- ⑤ 기타 의견 ( )

4.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 들어간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실업자 군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현 정부는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북 및 통일정책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금융, 산업정책 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②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 및 통일정책도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을 똑같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③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및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 ④ 기타 의견 ( )

5. 현 정부는 북한의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실현 등을 대북 정책의 3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지지
- ② 대체로 지지
- ③ 보통
- ④ 대체로 반대
- ⑤ 적극반대

6. 민간기업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시범적 남북 경협사업으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의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 ②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되, 계속 추진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해야 한다.
- ③ 현 국내외 및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추진 시기를 좀 더 늦추어야 한다.
- ④ 현 IMF상황 및 북한측 태도를 감안할 때 추진할 필요가 없다.
- ⑤ 특히 제주를 비롯한 국내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보류되어야 한다.
- ⑥ 기타 의견 ( )

북한은 지난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수정을 통해 국

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7.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
- ② 경계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
- ③ 완전한 적대 대상
- ④ 안보상 적대대상이지만 통일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
- ⑤ 기타 의견 ( )

8.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으로 앞으로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제보다는 정치, 경제적 개혁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 ②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 ③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 ④ 기타 의견 ( )

9. 북한이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추대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쟁도발 가능성을 매우 높일 것이다.
- ② 전쟁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다.
- ③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쟁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 ⑤ 전쟁도발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 ⑥ 기타 의견 ( )

10.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 ② 남북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 ③ 현재의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다.
- ⑤ 기타 의견 ( )

11.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다 유연한 쪽으로 일관성 있는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②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간다.
- ③ 보다 강경한 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④ 기타 의견 ( )



12.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력도발 금지, 핵 및 미사일 군사무기 개발 금지 문제
-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 ③ 남북 교류협력 확대 문제
- ④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 문제
- ⑤ 남북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
- ⑥ 기타 의견 ( )

13. 최근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자칭 인공위성 발사), 영변 핵 시설 의혹 등 군사적인 모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들이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 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가져온다.

- ②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다.
- ③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것이다.
- ④ 통일의 국제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남북관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⑤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도, 남북한 관계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⑥ 기타 의견 ( )

14. 선생님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관심이 없다.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15.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공 안보 의식의 함양
- ②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 ③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④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 ⑤ 기타 의견 ( )

16. 선생님은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교재 및 교육기자재
- ② 신문, TV 등 일반 정보매체
- ③ 전문서적
- ④ 강연 및 세미나
- ⑤ 기타 ( )



